

4만여 명을 숨화?

삼청교육대를 둘러싼 논란이 올림
피 이후의 정가에 최대의 이슈로 등장
했다. 삼청교육은 그간 12·17 사건, 12·12 사건, 5·5 사건, 광주사태와 함께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인 정치 사회적인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발생 8년 만에 본격적인 여론의 검증을 받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과연 삼청교육에 관한 모든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합리적이며 국민의 공감을 자아낼 만큼 충분한 정리가 이루어질지 미지수이나 어쨌든 이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으로 잊혀질 뻔했던 문제가 본격 거론된 것은 해결을 위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겠다.

삼청이란 용어를 누가 지어냈는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몸과 마음과 정신을 깨끗이 일소한다」 또 폭력과 폭기(강도 절도 치기배 포함), 공갈 및 사기범(서민착취배 포함), 사회풍토문란사범(밀수 마약 상습도박 포함) 등



얼공봉 체조를 하고 있는 삼청교육대의 교육 장면.

7월 88. 1 삼청교육대 그 비극의 전말

살인적 기합과 구타가 횡행한 인권유린의 세계

尹一雄 자유기고가

3종류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의미에 서 삼청으로 작명되었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얘기.

취지와 이름만으로는 그럴듯한 삼청교육은 국보위의 삼청계획 5호(80년 7월 29일)와 비상계엄사령부(사령관 李禧性)의 계엄포고 13호(80년 8월 4일)에 의거 그 막이 올랐다. 국보위 全斗煥 위원장은 사회 저변에서 국민생활을 괴롭혀온 사회적 독소를 뿐 리쳤다"고 공언했다. 뒤이어 곳곳에 서 검거선동이 불었다.

이때 연행된 사람은 6만7천55명. 이 중 3만9천7백42명이 군부대로 넘겨졌고 3천2백52명은 구속·군사재판을 받았으며 나머지 7천7백17명은 훈방 조치됐다. 또 삼청교육과 근로봉사를 마친 4만여명 중 7천5백78명이 1년(4천54명), 2년(2천4백88명), 3년(8백65명), 5년(1백71명)의 감호처분을 당했다. 이런 과정에서 피교육자 50명이 사망했고 8명은 부상, 79명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국방부 자료는 밝히고

있다. 특히 삼청교육 이수자 중 여자는 모두 3백 19명으로 이들은 80년 8월 12일부터 3주간 특전사 예하 11공수여단의 여군 장교들에 의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청교육 대상자들은 당국의 발표대로 폭력범, 파렴치범, 부모에게 주먹을 취두른 패륜아 등의 전과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들 가운데 현행범들도 있었지만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삼청교육 대에 끌려와 고생한 사람도 많았다. 또 선정과정에서 경찰의 마구잡이 단속에 의해 애매한 사유로 잡혀오거나 주위의 투서나 모함에 의해 진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연행된 이들도 있었다.

어쨌든 당국의 검거령이 내려진 후 불과 이를 만에 전국에서 1만 6천여 명이 잡혀 들어왔다. 삼청계획이 발표되기 1개월 전부터 각 경찰서 출소 가 점거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였기 때문에 단시일 내내 이처럼 많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었다.

대상자들은 기본사항만 기재하는

황색카드를 작성하고 경찰서 보호실, 유치장, 강당에 수용됐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는 통에 경찰서 수용시설은 꽉 메워졌다.

마구잡이 체포, 졸속심사

수원역 주변 사창가에선 군과 경찰의 합동경찰이 주위를 포위한 후 창녀, 뚜렷이, 포주, 손님 등 2백여 명을 집단으로 체포하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행된 사람들은 심사 위원들에 의해 A B C D 등 4등급으로 분류됐다.

심사위원회는 검사, 경찰서장(또는 수사과장이나 정보과장 등 간부), 보안대, 요원, 현병대, 요원, 중앙정보부 요원, 지역 정화위원 등 6~7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경찰서 수사계장이 맡았다. 수사계장이 보고하는 범죄개요에 따라 일사천리로 4등급의 판정이 내려졌다.

심사위에 간여한 정화위원은 당시 32만 5천 3백 48개 지역정화위의 5백 50만 8천 4백 99명 위원의 일부인데

삼청교육 대상자의 심사위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정화위는 11개 시·도, 2백 21개 시·군·구, 3천 67개 읍·면·동, 2천 8백 54개 통·반, 3만 5천 7백 15개 부락의 6만 7천 5백 67개의 위원회에 위원은 1백 13만 1천 51명이었다.

지역유지(58·8%)와 업소 대표(20·1%)가 태반을 차지한 정화위원들은 삼청교육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가려내는데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오히려 당국의 조치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대외적인 들러리 역할로 전략적이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중엔 군·검·경보다 한수 더 뛰는 작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정화될 사람들이 정화위원으로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심사위는 위원들의 합의제로 등급을 정했다. 판정이 내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 A급은 군법회의, B급은 4주 기본교육에 6개월 근로봉사, C급은 2주 기본교육에 귀가조치, D급은 훈방으로 처리됐다. A급 해당자들은 조직폭력·공



80년 8월, 사회적 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경찰서에 유치된 삼청 교육대상자들.

인들 별로 아는 게 없으니 간사인 경찰서에서 무장군경의 감시를 받는 것 외는 달리 한 게 없다고 하더군요』

기합과 구타로 시작된 교육

B급과 C급 판정이 내려진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무장군경의 감시를 받으며 전·후방의 26개 부대로 옮겨졌다. 그리고 부대에 도착하자 살벌한 채 군복을 입고 기본교육에 들어갔다. 말이 교육이지 가혹한 기합과 구타의 나날이었다.

柳英根씨(33·경기도 광명시 초대교

희 목사)의 회고.

『나는 무슨 금인지도 모르면서 경남

정에 수동적 위치에 머물렀다고 한다. (예비역 중령)의 말. 군은 경찰을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렀어요. 무엇보다도 경찰이 현지 사정에精通했으니까요. 나 자신도 경찰서 장설을 제엄지휘 사무소로 삼아 업무를 추진했읍니다만 심사위에는 정보참모를 보냈읍니다. 그 사람

군에서 나온 심사위원들은 선정과 정에 수동적 위치에 머물렀다고 한다.

(예비역 중령)의 말.

군은 경찰을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렀어요. 무엇보다도 경찰이

현지 사정에精通했으니까요. 나 자신

도 경찰서 장설을 제엄지휘 사무소로

삼아 업무를 추진했읍니다만 심사위에는 정보참모를 보냈읍니다. 그 사람

『소대 중대 단위의 편성을 마치고
柳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낮은 포복 「굴러」로 숙소인 대형천막까지 가야만 했다.

「자필 신상명세서」를 받았는데 「입소 동기란」에 무어라고 써놓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가 8월의 태양에 달 아온 연평장을 멘모이로 기어가는 기합을 받았습니다」

사단급 교육대에는 대령 또는 중령 이 대장이 되어 이들의 교육을 담당했는데 1백~2백 명 단위로 중대(중대장 대위·선임하사 및 행정요원)가 편성됐고 중대는 다시 교육생의 나이를 기준해 50명 단위의 소대(소대장 중위 또는 소위·지도하사관 1명)로 편성됐다. 그리고 각 10명 단위로 분대가 짜여졌고 여기엔 지도조교로 불리는 사병 1명이 책임을 맡았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생들의 일과는 아침 6시에 기상, 점호를 취하고 30분간 아침식사, 8시부터 11시 45분까지 교육을 받고 점심시간은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 4시 45분까지 교육이 재개되고 장비 손질, 저녁식사를 마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내무반 활동을 하고 다시 1시간 동안 자아반성 및 수양복 을 쓴 후 밤 10시에 취침하는 것으로

착ケット 교육생 1명을 지피 뒤에 매달고 연평장을 달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몸서리쳤다. 마치 서부영화에 나오듯이 말탄 사나이가 빛줄로 사람 손목을 묶고 맨 땅을 끌고 달리는 것과 똑같았다.

『사람의 살은 많아서 너덜거렸고, 땅바닥은 파로 물들어 있었지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어디론가 치워졌어요』

李씨는 또 잔인한 기합의 하나로 「겨울매미」를 들고 있다. 한겨울에 교육생을 발가벗겨 철사줄로 나무에 묶고 펜치로 서서히 죄면서『나는 겨울매미. 맴맴』을 외치게 하는 것이다. 柳英根씨는 「옹달샘 기합」을 받기도 했다.

『우리들은 얼음장을 깨고 알몸으로 시냇물 속에 들어가 깊고 깊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오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읍니다. 이제 바로 「옹달샘 기합」입니다』

『판빠라 기합』도 교육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한겨울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밤중에 팬티차림으로

되어 있다.

▲ 4주간에 행해진 1백 92시간의 교육 내용은 정신교육 24시간(초빙인사 16시간, 기초장애물 지휘관 훈화 8시간)과 신체 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 훈련은 ▲ 유격훈련(유격체조 20시간, 구보 40시간, 기초장애물 훈화 8시간)과 신체 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 훈련은 ▲ 각개전투(포복 20시간), ▲ 공수훈련(접지훈련 30시간) 등이며 일·퇴소식에 8시간이 할당됐다.

여자들은 3주간 1백 74시간의 교육이 실시됐다. 정신교육·안보영화·유격체조·구보·제식훈련·각개전투·접지훈련이 행해졌고 이밖에 지휘관 훈련, 분임토의·군가연습 등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여자교육생도 매 맞아

그러나 「교육」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교육생들의 24시는 그야말로 호된 고로 양팔을 벌린 자세로 줄지어 세워놓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군화발질질이 가능해지는 기합을 말한다. 여성 교육생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가해지는 기합을 말한다.

『저는 여자들만 대에서 2주간 훈련을 받았는데 30세 말.』

이하의 여자 하사관들이 훈련을 시키면서 동작이 조금만 느려도 곤봉이나 작대기로 막 후려치더군요. 끌려갔을 때 몸무게가 68kg이었는데 나와서 보니 58kg으로 줄었고 삼청교육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

통의 나날이었다.

『하나, 나는 교육대원 명령에 절대로 복종한다. 둘, 나는 신문잡지 구독 및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을 금한다. 셋, 나는 공공시설을 애호하고 음주 및 흡연을 금한다. 넷, 나는 주면 주는 대로 먹겠다. 다섯, 나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겠다. 여섯, 나는 개인행동은 일체 금한다』

교육생들이 4주간 삼청교육을 받으면서 외워야 했던 「수련생 수칙」이다. 교육생들은 이 수칙과 함께 「개과천선·반성속죄·새사람」이란 구호를 끊임없이 외쳐야 했다.

글자 그대로 교육만 받았으면 고통이 덜 될텐데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았다. 17세 소년에서 6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신체조건을 감안치 않은 「유격훈련」「P.T체조」「목봉체조」「공수접지」 등 강훈련이 되풀이됐고 그 사이 조교들은 「원산폭격」「한강철교」 등 온갖 기합과 주먹질, 군화발질질, 각목 등으로 구타를 일삼았다.

경기도 파주군 임진강변의 모부대로 끌려간 전직기자 李謙씨는 부대 도살인적인 기합과 구타 외에 교육생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긴 것은 열악한 식사. 식사의 질은 논외로 하더라도 밥의 양이 적어 모두를 배가 고파 허덕였고 개중엔 몰래 산의 침뿌리를 먹다가 조교로부터 무수하게 구타 당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계엄 해제 후에도 계속 억류

80년 8월 9일부터 4주간의 기본 순화교육을 받은 4만여 명의 교육생들은 9월 8일 교육이 끝나자 모두 집에 돌아갈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만 16명은 81년 1월 25까지 9차에 걸쳐 전후방 20개 부대에 서 근로봉사의 미명하에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교육생들은 4주간의 교육만 면 귀가 할 줄 알았는데 전체 교육생의 4분의 1이 넘는 1만 16명은 또 다시 수용소 생활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1만 16명에겐 「삼청 근로봉사대 자원서」 용지가 날라들었다. 자원서는 자의에 의해 3개월 동안 나라와 민

족을 위해 전방에서 근로봉사를 지원한다고 쓰여 있었다. 해당 교육생들은 물론이다.

그러나 기합과 구타가 행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손도장 찍기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근로봉사대 역시 처음 10여일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흐린 기합과 구타가 다반사로 행해졌다. 그리고 10여 일이 지나 근로작업에 나섰을 때 활당 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또다시 갖 기합과 구타를 당해야만 했다. 작업장 분위기도 살벌했다. M 16자 동소총을 든 무장군인들의 감시 속에 강제노역이나 다른 억압이 없었다. 국방부는 이를 근로봉사대가 주로 전술도로공 사와 방호시설보강공사에 투입됐으며 전투력 증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은 교육생들을 또다시 기만했다. 즉 6개월간의 근로봉사를 끝냈던 사회대 복구시키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천 5백 78명에 대체전」

1~5년의 보호감호처분을 내린 것이다.

81년 1월 25일 비상계엄령 해제는 근로봉사 대원에게 큰 기쁨으로 받아 들여졌다. 계엄령 해제는 삼청교육의 법적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의 효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숨겨진 권은 계엄 해제 한 달 전인 80년 12월 18일 「사회보호법」을 만들었다.

사회보호법은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80년 8월 4일 선포된 계엄포고 제 13호에 의거하여 특정시설에 수용 돼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7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담고 있다.

이런 내막을 몰랐던 대상자들은 막 상 자신들이 1월 28일자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국도의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보호감호 처분은 내려진 7천 5백여 명의 근로대원은 경북 청송군의 보호감호소가 원공되기 전에는 군부대에 그대로 남아 근로봉

2명으로 나타나 있다.

국방부는 또 사망자 50명 중 41명에 대해서만 사망원인(병명) 부검일자만 간략하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부검결과에 대해선 「기록이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사인불명을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의 같은 발표에 평민당의 조승봉 의원은 「국방부가 밝힌 사망자 50명 이외에 최소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질병 사가 70%인 35명, 복막염 4명, 폐염 4명, 기도폐쇄 3명, 뇌출혈 2명, 결핵 2명, 기타 8명으로 돼 있다. 나머지 15명은 사고사로 구타 8명, 충기발사 3명, 안전사고 2명, 자살

사를 계속했고 청송감호소가 완공된 81년 12월 초순 군부대를 떠나 민간교도 관들에게 넘겨졌다. 「무련한 죄도 없이 삼청순화교육대 삼청군로봉사대 군감호소를 거쳐 청송감호소까지 오게 된 사람들은 너무 시달려 국가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끼고 애국가와 국기를 험오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당국이 내세우는 순화교육 효과는 사실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季謫씨의 비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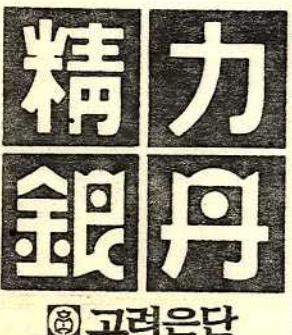
보호감호라는 재수감 처분은 1개 월이 채 안되는 기간에 심사가 행해졌다. 1만여 명 중 7천 5백 78명을 감호처분했으니 하루 평균 3백 30여 명씩을 심사했다는 계산이 선다. 청송감호소에 수용된 삼청감호생들은 83년 말경 대부분이 출소했고 삼청 교육 수용자가 운데 「27사단 사건」으로 중형이 구형된朴광현씨 등은 교도소에 복역중이다.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아울러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은 「지난 달 9월 29일 국방부 발표에는 삼청교육과 관련 사망한 강정수, 장영권, 김순태 씨 등 9명에 대한 사망일자 및 원인과 관련한 기록이 폐기된 것으로 밝혔으나 법사위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 가운데 6명이 구타로 사망했으며 사망일자 및 원인이 타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作心三月

갈팡질팡 안절부절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지만 男兒一言重千金이라
정력은단 친구삼아 3개월 고비 넘겨볼거나 !!



금연사례 연구

한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집단시와 관련 피교육자 36명이 구사대과

한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집단시 위와 관련 피교육자 36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29명은 징역 1~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7명은 무죄와 공소 기각으로 풀려났으며, 관련 군인 중 25명이 형집행 면제, 기소유예, 공소 기각 되는 등 1명도 실형을 받지 않음 것으로 드러났다.

군을
우한
군들이 잡지

月刊
八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삼청교육대의 최대의 문제점은 인권유린이 다반사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같은 인권유린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관계자들의 의식구조가 삼청교육대의 비극을 불러들였다고 볼 수 있다.

삼청교육이 시행될 당시 이 조치에 직·간접으로 간여한 관계자들은『삼청 교육의 근본취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회악을 과감히 고도 신속히 척결하는 데 있었다』면서

수험생,
직장인,
스포츠맨에게
줄습니다

- 피로회복
 - 식욕부진
 - 영양장애



비타민 B群+
비타민 C 700mg

하이닉스®

표준소매가 72,160 원 + 12,000 원

한동약품

인문학원 문제기

삼청교육대의 진상 못지 않게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삼청교육이 적법한 것이었느냐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삼청교육의 법적근거로 내세우우는 계엄포고 13호를 놓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선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포고령 13호의 내용은 계엄법 제9조 제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한 예

린 사회보호법 부칙(경과 규정)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는 소급입법이자 현 법정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 보호법상의 보감호처분은 형벌과는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범죄 예방적 처분」이며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법률 불소급의 원칙」 위반이 아니며 위헌도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계 인사들은 그 같은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정수 변호사는 「사회보호법이 아무

를 넘어서는 위법이라는 견해가 우선
시비의 첫째로 등장한다. 즉 계엄법
제9조는 「조사상 필요한 때」에 체포·
구금·압수·수색·거주 이전 등에 관
해 계엄사령관은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삼청교육이 과
연 조사상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느
나는 것이다. 따라서 삼청교육을 정당
한 법적 조치가 결여된 빗나간 비상조
치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법조계에
선지적하고 있다.

리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 시행 이전의 행위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으며 법률시행 당시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호 갈호 처분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삼청교육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삼청교육 대상자의 선정이나 교육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그

래도 만연하던 사회악에 상당기간이 나마 제동을 걸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합과 구타로써 순화가 가 거리가 먼 차하면 좋다는 생각도 교육과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초법적이고 혁명적인 조치로써 사회악이 일소되고 당사자들의 「개과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같은 발상 자체가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국보위의 「열 사람의 불량배는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라」는 지시는 실제 상황에선 먹혀들지가 않았다. 또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순화는 커녕 오히려 국가에 대한 배신감과 인간에 대한 혐오를 불러 일으킨 삼청교육의 입안자는 누구이며 그 배경은 무엇일까?

吳滋福 國방부장관은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삼청교육의 최초 입안자와 책임자를 밝히라 는 약당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입안과정에 군이 관여한 바가 없고

과민성 대장증상 ①
맥주 한잔만
마셨다 하면
영락없이
설사를 한다.



이는 술, 담배등 자극성 음식이 약해진 위장관을 자극하여 장의 운동기능이 과민반응을 일으켜 일어나는 과민성 대장증상입니다. 과민성 대장증상은 근본적으로 장이 약해져 생기는 증상 이므로 단기간에는 치료되기 어려우며 일반 정장지사제로는 근본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생 질환이라고 한마디로 재발이 갖고 고질적인 증상이므로 근본치료를 하여 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증상에 - '디세텔'

프랑스 라데마사에서 개발한 —
「디세털」은 소화기 평활근에만 직접
작용하여 장관의 기능이 정상화 되도
록 장의 세질을 개선함으로써 괴민성
대장증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원치를 위해 한달이상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표준수매가 : 100정 한달분 30,000원

胃와腸의 체질개선제
일양 디세텔 정
설사, 변비, 설사와 변비의 반복, 통증
아랫배불불쾌감, 복부팽만감, 구토, 복부경련

 일양약품

에 오른 것은 국방부가 밝힌 교육생 50명 사망 발표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완벽한 진상 발표에는 미흡할지라도 국방부가 앞장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데 대해 긍정적인 변화의 자세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 분명 군 당국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옛날 같으면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비판을 받을 치부를 어떻게 감히 드러낼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진상
선명히
발휘져야

한국에서 50만을 불교한 군 당국의 변화에의 노력으로 결코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이러한 군 당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국민들은 이왕이면 군 당국이 삼청교육의 진상을 보다 선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예상치 못한 발표를 놓고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즉 이 사건이 의외의 시점에서 발표됐고, 사건과 관련한 군부대장의 명단까지 상세하게 나온 점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여기에 어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지 않는가 하는 분석도 하고 있다.

육에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과 그 가족 들에 이 사건에 담긴 모든 사실과 진 실이 날침없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 은 책임을 지우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 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 때 비로소 억울하게 숨진 사람들의 원 혼이 달래지고 피해 입은 이들의 한이 풀리며 가해자들 역시 회개를 통해 도덕성을 회복, 상호간에 화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목 적은 정당성을 떠기 어렵다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서 교훈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을 점검해 볼 때 국립교육과
사회정화위 등 관련기관들은 삼정교
육에 있어 자신들의 역할을 「하수인」
에 불과했다고 축소 주장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삼정교육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 문제는 국보위와 소위
개혁주도세력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삼정교육대의 계획 또는 예산
의 1차적 책임은 당시 업무 사범 행정
기관을 장악했던 전두환씨와 이희
정기관을 장악했던 전두환씨와 이희

다만 시행만 맡았을 뿐이어서 확인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吳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비록 8년 전의 일이나 사회에 논란과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吴장관은 또 “삼청교육은 국보위가 입안했으나 그 기구가 해체돼 자료를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최초 입안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교육 실시는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아래 육군본부 기관이 관리실장이 담당했다”고 답변을 했다.

성 계엄사령관에게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삼청계획은 국보위 사회 정화분과위원회(위원장 김만기 당시 안기부 감찰실장)에서 입안했고 그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인물이 헤문 도 당시 안기부장 비서실장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 5공비리특위에서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최초의 입안자를 비롯 관련자들의 역할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柳永根씨는 삼청교육의 원천적 계획 입안자로 『허삼수 대령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각부대에서 실시된 순화교육 및 그로봉사·감호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혹 행위를 당하고 사망자들이 발생한 데 따른 현장의 고위 지휘관들의 책임도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단 중에서 가장 많은 6명의 사망자가 나온 특전사(당시 사령관 정호중·현 민정당 의원)의 경우, 과연 전쟁이 끝난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씨는 예전에 후 내무부장관이 됐을 때 기자들 앞에

둔 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즘 세상은 부모가 자식 뺨을 때려도 안 되는 세상 아닌가』 그런 정씨가 비록 삼청교육생에게 직접적인 구타 등의 가혹행위는 안했지만 가장 많은 사람자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책임자로서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그의 처신을 지켜볼 일이다.

日本속의 韓國文化

일본문화의 고향은 한국
현장활인 탁박 가이드

일본문화의 원류가 고대
한국이었음을 확인하려는 탐방객이
늘어난다. 이 역사탐방에는 在日
사학자 金達壽 씨가 쓴 「日本속의
韓國文化」가 정확한 길잡이가
된다. 규수, 교토, 오사카, 나라
등을 15년 전부터 답사하여 기록한
이 책은 일본학계에서도 정설로
인정한 '일본의식의 한국문화'
탐방기록이다.

朝鮮日報社